

제31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월18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노동현안 대책논의

## 심사된 안건

1. 노동현안 대책논의 ..... 1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1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동부도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쁜 업무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의 현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폐회 중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현안 사안들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등 많은 현안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좀 더 분명한 것을 밝혀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 드리는 게 우리 위원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집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 취지에 잘 부합하게 임해 주시고, 장관께서도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노동현안 대책논의

(10시21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동현안 대책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오늘 안건에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사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폐회 중인데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 해결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근로자들의 불행한 일도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공농성 중인 분들은 그간의 농성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문제를 잘 풀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노사 당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섭이나 협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쌍용자동차 노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상생과 양보의 정신을 바탕으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토록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져서 희망퇴직자, 또 경영상 해고로 일터를 떠난 분들도 하루빨리 재고용될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업장 노동현안을 노동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조재정입니다.

주요 사업장 노동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이마트·유성기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관련 사항입니다.

노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2년 2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도급근로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지회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사이 노사 간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비정규지회가 요구안을 고수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2012년 8월 16일 2015년까지 도급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2012년 12월 13일 도급근로자 3500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최병승 외 1명이 송전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울산지법은 최병승 그리고 비정규지회 등에게 송전탑 점유 해제 및 주차장 출입금지·시설물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울산지법은 금년 1월 8일 송전탑 주변 농성장 철거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비정규지회 등의 물리적 저지로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현대차지부가 특별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비정규지회의 회의장 봉쇄로 무산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지부는 특별협의를 및 비정규지회 농성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금년 1월 7일 사측은 최병승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고 사내도급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등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은, 아산공장 사내도급근로자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에 있으며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도급근로자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아산·울산·전주공장 사내도급근로자 건이 중노위 재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노사 면담·유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 자제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속 지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1월 22일 그리고 금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차 관련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불법과건 및 사용과 관련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쌍용차 해고 관련자 3명은 국정조사 및 복직을 요구하며 송전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8일 쌍용자동차 노조 류모 조합원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자녀 질병 등에 따른 생활고, 정치권의 개입 및 경영상 해고자들의 영업방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 노사는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는 한편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 방문, 마힌드라 이사회 의장 및 노사 면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무급휴직자 등의 조속한 복직 노력을 지속적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등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경영상 해고자 156명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4쪽입니다.

무급휴직자 248명은 2009년 8월 합의에 따른 복직 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의 금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용차 구조조정 관련 회계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사측과 보험사 등은 쌍용차지부 등에 대해 손해배상 289억, 가압류 39억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상황입니다.

2012년 3/4분기까지 매출 3조 524억, 영업손실 692억, 당기순손실 659억입니다.

주간조 3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이 정상가동되고 1개는 일시휴업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쌍용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쌍용차 퇴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용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무급휴직자 직접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희망퇴직자, 경영상 해고자들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상황입니다.

2011년 6월 27일 노사대표는 노조파업 철회 등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고공농성자, 상급단체, 정치권 등이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노사는 해고자 재취업 등 노사합의 및 크레인 농성을 해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6일 사측과 기업별 노조는 임단협에 합의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9일 경영상 해고자 92명이 특수선 부문 발령 후 휴업조치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조합원 최모 씨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 등은 손해배상 철회, 유족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지속하고 있고 기업별 노조는 손해배상 관련 사측, 한진지회에 공동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등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상황입니다.

현재 영도조선소는 일부 특수선 부문만 가동중이며 2008년 9월 이후 상선 수주는 없고 2012년 말 특수선 부문 가동률은 56%입니다. 2012년 3분기까지 당기순손실 783억 원이며 금년 1월 현재 근로자 1338명 중 383명이 휴업 중입니다.

그간의 조치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노사 합의 이후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도하고 있으며 노조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제기나 증거 제출이 없는 상황으로 사건 제기 시에는 철저히 조사 처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이마트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사측은 현 노조위원장을 전보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이마트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회계감사 및 위원장을 해고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 변경이 있었습니다. 노조 회계감사 및 위원장은 각각 부당해고·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현재 중노위에 계류 중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 노조 등은 사측의 직원 감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처리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유성기업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1년 1월 18일부터 5월 4일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노사 특별교섭이 있었고, 5월 18일 노조는 공장 점거, 5월 24일 경찰력 투입으로 점거가 해제되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노사는 업무 복귀와 관련한 잠정 합의를 통해 8월 31일까지 업무 복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7명에 대한 해고 등 징계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천안지원은 단협상 징계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1일부터 홍종인 지회장은 아산공장 인근 교각에서 농성 중이며 2012년 11월 14일 천안 그리고 청주 고용지청 등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아산·영동 공장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6일 1노조와 사측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간의 조치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고자 복직은 노동위원회 판정 등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금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 모두 중노위·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화 등 협의의 주선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현안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

고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다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하나 위원이 질의할 순서인데 심상정 위원이 조금 먼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 질의네요. 자꾸 은수미 위원을 내가 장하나 위원이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심상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문서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노동자들의 절망, 자살에 대해서,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기대와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회의라는 점에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순히 정부에 대한 질의를 넘어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뜻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장관과의 질의를 마치고 환노위 위원들 간에 자체적인 논의·의결 시간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현안이 있는데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네 가지,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현대자동차·유성기업은 이 현안 자체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될 책무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약속을 한 바 있고, 또 당선자께서 특히 약속하신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건이고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건은 바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2011년에 중재한 대타협의 합의 이행에 관련된 건입

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는 잘 알지만 개정된 노동법의 이행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의 제2노조 취소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확인된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1월 임기국회 때 확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환노위에서 다시 한번 결의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문제는 2011년 노사가 합의한 국회 권고안의 정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늘 재권고, 재차 권고 결의를 해 주시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한 내용인 만큼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자 이런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지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농성자들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국회가 또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경찰이 강제 철거를 유보하고 교섭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으면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성기업의 제2노조는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결사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지난 국감 때 우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부가 법에 따라서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 환노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토론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회 환노위가 협조할 수 있는 결의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이 맨 처음에 우리 위원회 운영과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와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자꾸 이름을 잘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은수미 위원님, 민주당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위원님인데 첫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민주당의 초선의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뒤에도 참관인으로 쌍용차 해고자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최근의 쌍용차 부당해고,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그리고 유성기업이나 이마트를 비롯한 노조 파괴 등 노동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동권 유린을 5년 내내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역시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책임을 어떻게든 안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국정조사라는 의회 고유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한 부당한 개입, 예를 들어 평택지청장께서 국정조사 반대 지역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1월 11일 날은 이채필 장관께서 ‘국정조사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사실은 의회 고유 권한인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개입 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평택지청장께서 나오셨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나왔습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 발언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평택지청장 박광일입니다.

**○은수미 위원**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막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정조사가 의회 고유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이며 특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또한 대선 시기 박근혜 당선인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등이 새해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그렇게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반대 집회에 참석하신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어제 행사에서 결의에는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신문이 오보를 한 것입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총 네 가지의 신문에 났던데요.

그러면 결의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어제 있었던 행사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추진위원회이고요. 그 위원회에서 쌍용차 노사와 이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 반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 결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왜 그 장소에는 가셨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위원회 자체는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위원회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오보에 대한 중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잘못된 보도에 대한 것은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몇 개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박광일** 예.

○**은수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채필 장관께서는 1월 1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지금도 국정조사는 반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릴까요?

○**은수미 위원** 예, 주십시오. 다만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정조사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다면 그동안 청문회도 했고 국정감사도 했고 판단을 나름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이게 여야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논의 중이라 할지라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논의 중인 사항이라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뒤흔들거나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지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좀 믿고 싶고요. 그렇지만 다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느냐 하면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국정조사를 반대한다고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후에 이런 행위를 하신다면 그런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뒤흔들려 한다는 오해, 심지어는 확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장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파장입니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리해고자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든 청문회에서 고용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확인을 이미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지요.

고용부는 쌍용차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공식 의견을 2009년에 이미 낸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평택을 고용촉진지역 등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4쪽에서 나온 것처럼 직업훈

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런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실제 그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파일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 파일 띄워 주시고요. 좀 어둡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쌍용차 실직자들이 시기별로 실직을 한 상황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 그 이후부터 2009년 6월까지 그다음에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0년까지. 아래 두 항은 사실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실직을, 그것도 비자발적 실업자라 함은 정리해고 등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2년 이내에 몇 %나 재고용이 됐는가를 쌍용차, 평택 그다음에 경기, 여타 자동차산업 이것을 고용보험 DB에서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

쌍용자동차 초기,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 그때도 쌍용자동차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재고용률이 40.7%, 이것은 2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6개월 이내는 너무 낮아서—1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2년 이내로 가져왔습니다, 40.7%. 그런데 그 이후 2009년 6월까지 실직한 사람의 2년 이내 재고용률 37.2% 그다음에 2009년 7월부터 2010년까지 26.8%, 재고용률이 이것입니다.

고용부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혹시 다른데, 자동차산업이 아주 안 좋아서 그랬을까 봐 다른 것에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택입니다.

평택지청장께서도 책임이 막중하실 텐데, 평택의 경우는 72.8%에서…… 평택이 고용촉진지원 지역으로 약 1년간 설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투하된 돈이 260억이 넘는데 그래서 재고용률을 보면 58.9%, 54.9%로 더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경우 기타 지역의 자동차산업을 보면 비슷합니다. 결국 돈 260억 플러스알파를 들여서 재고용을 촉진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가 26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었노라 그리고 국정조사는 반대하노라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뒤흔드는, 그러한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적 파장을 낳는 행위를 중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정말 이것밖에 못 하신다면, 그러니까 지원계획이 직업훈련·취업알선, 고용촉진지역 이런 것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국민들의 돈을 들여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저렇게 거리에 내모는 일을, 4년 동안 노동부가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숙하고 사과하실 것을 촉구하고요.

또한 개인적으로의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촉구결의안, 결의성명서를 본 위원 역시 여기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야 합의로 결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 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신계륜 작년보다 훨씬 세련됐고 아주 그랬습니다.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언하실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짧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관계 문제가 돼서요.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이 인용하신 데이터는 고용보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의 경우에는 빠져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됩시다라는 빠져 있다는 점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말 현재 퇴직자 2152명 가운데 1232명, 57%가 재취업이 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짧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 말씀 짧게 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저도 통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게 뭔지 압니다. 저것은 고용보험 데이터, 즉 최소한 고용보험이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노가다 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의 급여 수준이, 임금 근로자, 최소한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런 데 취업시켰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요즘 너무 바쁜 시간 많이 보내시고 계시던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의 이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어느 분이 쓴 칼럼인지 기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자라는 것이 항상 사측의 바람이었고 주장이었는데, 그분은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 법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노동계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거 아이러니라고 할까,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마트, 유성기업 이런 쪽에서는,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이 2개 기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노조 파괴 행위와 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해 주셨고, 현대차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장관님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이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리더십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종훈 위원** 어떤 누구의 리더십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 모두의 리더십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대표성 있게 조합원들의 뜻을 과연 대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결부된 결과로 나타난 복합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종훈 위원**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이마트 경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노동부는 사전에 인지했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에 대해서……

○**이종훈 위원** 첫째 궁금한 것은 인지를 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발표된 사실이 맞다고 노동부에서는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마트의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연말에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또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마트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제가 보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인수위에서 어떻게 이런 노동현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전에 정부가 다 인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한 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국회까지 이 문제가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노동부가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뭐라 그럴까 미흡했다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별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측이 이 제도를 매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많이 지적됐고, 또 장관님께서서는 특별히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 적극적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 정부 출범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전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조 파괴 행위,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새 현장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노노 갈등입니다.

쌍용차 문제도 남은 자와 떠난 자 간에 노노 갈등이 있고 현대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노노 갈등이 있고, 한진중공업도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노 갈등도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동

부의 공정한 조정 중재자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의 생각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산업현장에 노사를 막론하고 법이 지켜지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책임이 물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서 노사 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편의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례들이 과도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과 연대로서 소수계층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사항이라고, 즉 소수계층을 무조건 옹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소수자일수록 더욱더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노동계 내부에서의 리더십, 대표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쌍용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쌍용차 청문회 맨 마지막 발언으로서 국회가 나선 이상 책임공방을 넘어서 뭔가 해법이 제시되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다섯 가지 원칙을 제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성의 있는, 그래서 해고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무급휴직자 복직 계획,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 생활안정 프로그램, 회사 정상화 계획 및 추진, 심리치료를 포함한 힐링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쌍용자동차 기업노조와 사측 간에 무급휴직자 복직을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첫째, 장관님께서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원

칙이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공감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것은 분명 상황 변화는 상황 변화인데 이것이 문제 해결이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고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이 상당히 더더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함께 일귀가는 그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급휴직자부터 먼저 복직을, 돌아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면 경영상 해고자, 그에 앞서서 희망퇴직자 이런 부분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정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까 은수미 위원 발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가 됐는데, 장관님께서 국정조사는 곤란하지만 국회에서의 다른 논의는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미가 국회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길이라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경영정상화에 저해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가 지금까지 그 문제 완결을 위해서 하신 것은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고용

노동부장관인 제가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이사회 의장을 두 차례나 만나서 강력하게 쌍용차의 장점이라든지 투자를 촉구한다라든지 무급휴직자를 포함해서 정리해고자까지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 난다라는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제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와 산하단체에서는 차를 살 때는 가급적이면 쌍용차를 사 주기로 하자 해서 현재 73%가량은 쌍용차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종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장하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일단 장관님께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장하나 위원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지 장관님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쌍용차의 경영상 해고가 왜 왔는가,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규명을 하시고자 하는 듯합니다.

○장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의 목표 자체가 정리해고자 완전 복직이라든가, 일단 무급휴직자 부분은 제가 왜 국정조사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왜냐하면 이미 2009년 8·6 합의 때, 2010년이 됐지요, 1년이 경과한 2010년 8월에 이미 그분들은 복직되시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약속이행이 2년 반이 지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되어야 하지 마치 이제 와서 복직된 것을 환영하고 그것으로 심지어 국정조사의 목적과 전혀 상관도 없는데 국정조사 하지 말라는 이런 목소리까지 모아 가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관님께서서는 이런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쌍용차의 구성원인 노사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노사가 함께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진행 상황 속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쌍용차의 경영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함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장하나 위원 물론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아닌 하여튼 전반적인 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문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회계조작의 부분과 쌍용차 먹튀 부분이라든가, 사실 쌍용차 기업을 살리고 말고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심지어는 정부의 과오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정조사를 하면 마치 쌍용자동차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논리도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경영상의 피해가 있길래 그런 논리가 계속 반복 재생산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둘째로는 물론 지금 쌍용자동차가 건실하게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부당하게 해고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2000명 이상의 이런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또 국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은 외국계 회사들의 먹튀 행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너무 비약된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노측에서 국정조사를 한목소리를 내어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분들과, 개별 개별의 노동자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는 그 안에서 만약에 무급휴직자가—이건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 전입니다—복직되거나 아니면 희망퇴직자들이 돌아오거나 정리해고자 역시 돌아오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너희들이 희망퇴직을 해야 될 것이다’라며 ‘까불지 마라’ 그리고 ‘문지기 하지 마라’, 이렇게 숨통을 조여 놓고, 노동자들이 할 말도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계속 이런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좀 강압적인 사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사측과 함께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상시적인 근로감독이나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분위

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지금 평택지청장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사태 파악을 하셔야만 이런 공식적으로 표명된 입장 이면에 있는 진실도 좀 노동부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서 파악을 다 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노사민정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편향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런 사정까지도 한번 헤아려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 관련해서요.

진상 규명은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해 온 부분도 있고 또 계류 중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름대로 가장 공신력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하나 위원** 예, 그러면 계류 중인 사건이 있고 아까 아직 사법부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의 전제랑 뒤의 결론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전제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들도 그런 점을 감안하여서 적정 수준에서만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한 의견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앞의 전제랑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복직 얘기 한번만 더 해 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복직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아주 상반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복직 약속이 2년 5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사측 노무관리 상무는,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임금체불 소송을 취하한다는 복직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급휴직자 복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뒤로는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건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무급휴직자 복직, 당연한 거고요. 합의 이행이고 2년 5개월 동안 밀린 임금, 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공감은 하시지요, 별개의 건이라는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기업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하나 위원** 그 합의 내용에 있는 '1년 후에 복직한다' 이런 것들도 경영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회사만 살고 국민들은 죽어가는 회사는 왜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일거리가 있어야 복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영사정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하나 위원** 지금 일거리 가지고 복직을 운운하고 사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노동자들한테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상생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왜 사회적 책임을 갖느냐 하면 회사만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같이 살아야 될 책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기업들이 국민들 세금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습니까? 국가랑 전혀 상관없이 따로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회사 먼저 살아야 노동자들 일자리도 있다, 이런 시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용노동부장관님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측이 그렇게 주장할 때도 만에 하나 노동자의 일자리, 심지어 지금은 노동자의 생명이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의 노동자라도 인간다운 삶 그리고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할 만큼의 여력이 기업에 있는지를 더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하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국민들 앞에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국정조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조작적인 회계 부정이 있었고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소박한 삶을, 정말 같이 저녁에 둘러앉아서 밥상 차려먹고, 뭐 이런 따뜻한 삶 자체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싸그리 다 짓밟았다면 노동부는 앞장서서 이런 기업 행

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책임을 문책하고 지금 고용 여력이 있다면 빨리 고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앞장서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지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기업이 하는 주장을 마치 앵무새처럼 다시 반복하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 되어서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난 7, 8개월 동안 장관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급휴직자 문제에서 소송은 소송이고 복직은 복직이다, 만약에 무급휴직자가 복직됐기 때문에 국조를 거부한다는 이런 사측의 요새 입장 표명들, 이런 내용들이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복직은 복직이되 2년 5개월 동안의 임금체불건, 소송건과 이것을 뒷거래를 한다는 이런 것들을 빨리 노동부가 파악을 해서 그런 진실 또한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만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몰타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런 안건들도 또 앞장서서 좀 알려야 하는 게 저는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그래도 믿을 만한 게 그런 정부다’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국민들과 노동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왜 근로감독을 하시고 노동지청에서 쌍용차에 들어와서 현안들을 파악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과 똑같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아쉽고 실망스럽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오늘 안에라도, 오후에라도 소송 취하하고 복직을 거래하려는 이런 사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향 파악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8월 6일 합의 시에 날짜를 못 박아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생산물량이 늘어나서 경영이 호전될 때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노사가 구성하는 기업의 경영정상화하고 연결돼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치 노동자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구직자, 일자리를 주는 기업,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짧게 하시고……

○**장하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에 장관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장하나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장하나 위원** 1년이라는 내용이 합의서에 만약 없었더라면, 무기한이다,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복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오히려 확실했다면 그중에 많은 분들은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직을 한다거나, 지금은 휴직 상태니까 쌍용차 직원 아니겠습니까?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1년이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3년 반을 아무런 수입 없이도 쌍용차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측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받는 것이고…… 이게 임금에 대한 소송이든 어쨌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 이런 소송들은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장관님과 또 시각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먼저 새해 들어 오늘 처음 뵈 장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동안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장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정조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쌍용차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朱永順 委員** 예, 쌍용차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가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업 구성원인 노사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쌍용차 노사 모두 회사의 흑자 전환에 방해가 되는 국정조사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 세계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무급휴직자 관련 쌍용차노동조합과 노사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朱永順 委員**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의 말을 인용해서,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향후 4, 5년 동안에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朱永順 委員**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이런 국정조사를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가, 이게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로 쌍용차와 같은 특정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 국정조사

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제시된 사항들은 대부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HPV, 다시 말해서 시간당 생산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특별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 10일, 455명 무급휴직자 복직이 노사합의로 결정되면서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회사의 흑자 전환에 방해가 되는 국정조사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노사가 이렇게 강력히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정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그동안 쌍용차의 경영상 해고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생각하시는 듯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사법당국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다가 또 경영정상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나름대로 또 직접 말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어제 17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사민정 대표들이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 및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들었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지난 한 해만 약 740억 원으로 추진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쌍용차나 정상 근무시간도 못 채우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나 어려움을 나누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희망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쌍용차 정상화만이 현재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희망퇴직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는, 정치권

과 정부 또 사회가 다 쌍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쌍용차 100대씩만 팔아 주면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때 쌍용차에서 생산하는 대수가 한 12만여 대인데 16만 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경영이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3만 대 정도면 바로 무급휴직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3만 대 나누기 300을 해 보니까 100대가 나왔습니다. 해서, 다급한 나머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쌍용차 국정조사 주장의 핵심은 회계조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상세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회계조작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6개월간 회계감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 5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에서조차 지난해 1월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과대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현재 2심에 진행 중인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HPV, 즉 시간당 생산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특별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쌍용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장관님 인터뷰를 보니까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주영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복잡했지만 일감이 없어서 무급휴직자로 생계마저 어려워진 한진중공업 사

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의 반면교사입니다. 쌍용차에만 5000명의 근로자가 있고 대리점, 정비업체 다 합쳐서 11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우선이고 중요한지, 왜 쌍용차 사측과 노동자들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입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정치권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쌍용차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비상경영체제 시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마지막으로 김규환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쌍용차 살려 달라며 정치권에 자금난을 호소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있느냐—여야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이제 공장이 좀 될 만하니까 우리를 희생양으로 몰고 간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타깝다면 차라리 쌍용차 한 대씩 사주기 운동을 벌여라, 차를 팔아주는 것이 복직의 최선의 길이다……

만약 국정조사 운운해 가지고 어렵게 합의된 노사합의가 결렬된다든가 마힌드라가 지금 1조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는데 국정조사로 인해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1조 투자를 포기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장관님 답변 나중에 하세요. 시간이 지난 질의니까 주영순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나중에 장관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말씀하세요.

○**홍영표 위원**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주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금난이 어려울 때 호소를 해도 국회가 외면했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조는 마힌드라가 회사를 인수했으면 제대로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된다는데, 저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는데 그 반성을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될지는 아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그쯤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쌍용자동차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새삼스럽게 그 내용을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이 MB정권에서 친기업·반노동 정책이라는 기초에서부터 출발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던 심각한 정리해고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24명의 고귀한 소중한 목숨이 물고 온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불행, 이것이 한국사회 전체 오늘의 불행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환노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것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수차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불행의 가장 비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징인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철탑에 올라가서 두 달 이상 칼바람을 맞으면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그 한가운데서 두 달 이상을 강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저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분이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새누리당에서 우리 환노위의 간사인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국정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모호한 사실을 다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12월 4일과 11일 새누리당 선거의 총괄선대본부장께서 연이어서 대선 이후에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아주 확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우여 대표께서도 수차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총괄본부장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지금 당선인의 약속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정상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을 밝히면서 최종의 목표는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 국정조사를 참으로 덮어두지 않고 밝힐 것은 밝히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 있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환노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노위를 다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환노위는 오늘 어떤 대답을 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임해서 국정조사의 촉구결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강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문제와 신세계 등의 노조 탄압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직원 사찰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몇 마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마트 문제는 이미 저희 당 의원들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어제, 17일 SBS 8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건설 그리고 백화점 등 모든 계열사의 직원을 사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노조활동을 감시해 온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파렴치하고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그룹에서 전방위적으로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확인된 사항과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숙 위원**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이마트와 신세계의 이런 문제를 언제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조사가 착수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난 연말에 사건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위원** 조사라는 것은 근로감독을 얘기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특별근로감독입니까, 아니면 그냥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점도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수사를 한 뒤에 단계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진척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조사된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문제 제기는 하면서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은 신세계가 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것이고, 그리고 무노조 경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노총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은 정

말 심각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지금 임기 말인데요, 임기 말일지라도 보여주기 식…… 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철저한 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지금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실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지금 현재 근로감독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근로감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명숙 위원** 신세계그룹 측은 언론사에서 보도한 해당 문서가 내부 문서가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 담당 라인의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계열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것이 과연 직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했다는 사안으로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노동부의 임기 말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저희들이 특별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진행해 가면서 필요한 범위라면 성역 없이 어디든지 하겠고요.

저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명숙 위원** 예,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금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고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믿고 맡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MB정부에서의 이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기초가 지금 새 정부에까지 넘어와서 새 정부에서도 이것이 연결돼서 노동자들의 탄압과 죽음으로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 이런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발전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부 그리고 여야가 합쳐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위원님 한 말씀만, 5초만 드리겠습니다.

MB정부가 친기업·반노동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기업 속에서는 노동과 경영이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친기업일지는 몰라도 반노동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드리고요.

○**한명숙 위원** 저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동부의 역할이 산업현장에서 노사 당사자를 조정·중개해 가지고서 기업의 상호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만족스럽게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그게 주역할 아닙니까,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최봉홍 위원** 포함되는데,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노동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노동부 간판을 국회에 달아야 될 형편입니다. 저는 아직 안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노사관계 개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노사 당사자가 직접 풀어야 될 문제를 정부가 이래저래라 하는 것이 옳느냐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노사 당사자가 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실제 보면 현대자동차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회사가 미흡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기껏 해 가지고 철탑에 올라간 최병승 씨 하나 발령을 내고 나머지 불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한 벌칙이 솜방망이 벌칙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여기도 양 노조가 갈라져 가지고 깨지다 보니까 실제 거기도 이번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법 때문에 일어났던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확실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조사로는 노동부 감독관이 오히려 회사 편을 들었다는 물증까지, 실증까지 잡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유성기업 지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충분히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의논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노동부로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나 거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식 처벌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제한이나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더라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징치사항을 좀 증가시켜 가지고, 한시법이라도 좋습니다. 노사 간에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문제하고 운영상의 성숙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벌칙만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최봉홍 위원** 그러니까 못 하면 한시법이라도 하자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SJM 문제가 컨택터스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구속되고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틀 만에 들어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11개 사항을 합의했는데 첫 합의서는 8개 사항, 그 이후에 또 4개 사항 등 12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사 간에 마찰이 되고 있는 손배소 문제와 고소 고발 문제는 확실한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노동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사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응어리진 마음을 서로 풀어 주는 겁니다. 걸으려는 풀었다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안산지청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합의를 안 하고 질질 서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은 다시는 없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목적은 해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는 그 해결책이 정부 책임이 안 나서면 해결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마힌드라 회장하고, 본인 회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열심히 했더니 답이 뭐냐, 자기는 깨끗한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 판결을 받고 인수했다 이겁니다. 투자, 무급휴직자는 자기가 책임지지만 그 외 자기 책임 없다 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회계 조작에 의한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피해자·자살자·사망자에 대한 보상, 책임자 처벌, 이명박 정권 당사자 공개 사과 요구 이 네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민주당에서 나온 국정조사 요구는 열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노조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인데, 이 네 가지 사항이 국정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 속에서 마힌드라와 정부가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복직 문제와 보상 문제, 책임자 처벌 문제 이거 해결할 방안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가 되어서……

○**최봉홍 위원** 경영정상화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요구사항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최봉홍 위원** 그러면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회계 조작이 됐다, 회계 조작이 돼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회계 조작을 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고 없습니다. 우선 조사를 하려면 상하이 자본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상하이 없습

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누가 돈을 내 놓을 겁니까? 누가 복직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국정조사는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 가지고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문제 나왔을 때 환노위 차원에서는 감사, 청문회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당 차원에서 대선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그런 당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 차원에서 원내에서 할 사항이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넘겼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국정조사 전에 확실하게 어떤 면을 조사해 가지고 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게 없을 때에는 차라리 쌍용차 노노 간에 서로 합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서 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노노 간에 지금 완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고자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은 신규고용이 하나둘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용차에서는 지금 바깥에 나가 집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직종에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야 차이 나겠지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정책지청장이 좀 앞장서 가지고 노노 간에 서로 화해를 유도하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노동 문제입니다.

IMF 이후에 정리하고 합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웃소싱, 소사장제 합법화해 왔다가 지금은 소사장제가 불법이 되니까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합법화해서 전국에 6000개의 용역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사들 중에는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자들이 거의 90%입니다.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6000여 개 전부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된 용역회사의

실제 운영규모가 어떤 것인지, 크게 봐서는 현대 글로비스나 삼성로지스틱스가 포함됩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요새 ‘경제민주화’ 하는데 노동경제도 민주화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유통과정에 돌아가는 하도급, 파견, 그 계약과정에 돌아가는 그 돈이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정에 위원님 준비됐나요?

한정에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한정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일단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할 때 그 당시 현대자동차의 김억조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한 내용이 ‘현대자동차에는 불법파견이 있다. 최병승 1명이 아니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정규직화 대상이 최병승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때 답변 주고받았을 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맥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정에 위원** 아니, 그 내용입니다.

“불법파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불법파견이 있습니다.”, “그게 최병승 1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한정에 위원**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에 있다는 뜻인가요?

○**한정에 위원** 현재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면 답변하신 분에게 확인하셔야지요.

○**한정에 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적 판단을……

○**한정에 위원**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노동부가, 특히나 울산지청이, 8월 2일자로 실시된 고용

의무제에 따라서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발견한 곳도 울산지청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두고 울주군까지 가서 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파견노동자가 6명이 있다, 직접고용 해라라고, 고용의무에 해당되니까 직접고용 해라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현대자동차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우리 회사에는 불법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까지 답을 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꾸만 검찰에 고소된 내용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지휘 받아 가지고 나온 결과대로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있는 당사자, 당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불법파견이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회사를 두고 다른 데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불법파견이 있다, 없다를 말쑤를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8월 2일자로 고용의무제가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최병승과 같은 업무에 속한, 최병승으로 대변되는 불법파견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와 같은 사건들이……

○**한정에 위원** 사건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한정에 위원**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정에 위원** 그게 다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동부가 언제 노동부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업체들만—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쫓아다니시면서 불법과건이다, 아니다 벌금 때리시고 과태료 때리고 하는데 왜 대기업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신세계 이마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병승으로 대변되는 불법과건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차 쪽에서는 3000명으로 시작을 하겠다 일단, 그런데 그게 3500명까지 늘었지요. 그 사이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뭘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면 국회에서 나와 가지고 일일이 이 사람이 최병승에 해당되는 불법과건에 속하니 이 사람이 해당된다, 저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결국 그 과정에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고용 안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긴 지난한 세월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는다,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사실은 노사 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가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은 현대차의 사내도급 근로자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역할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최병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문제도 엄청난 촉구를 해서 나온 것이고, 또 원래 회사에서 채용하기로 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더 빠른 시기에 채용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근무한 경험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라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가능하시면 지난 10월에 있었던 부산지방고용청 국정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억조 부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좀 보시고 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과연 거기에 그치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쌍용자동차의 경우에 앞서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미 국정감사와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국회에서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가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전원 어쨌든 복직을 시키는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지난 쌍용자동차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라인에 대해서, 3라인이 어쨌든 100% 이상 풀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무급휴직자를 다시 복직시켜서 라인을 좀 나눠서 일감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창원 엔진공장도 여전히 디젤엔진 라인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답변도 했고, 그때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연장근무가 많이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관계 부분 창원공장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각각의 공장별로 몇 명 이렇게가 아니고요, 최대한 무급휴직자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는 희망퇴직자에 이르는 등 많은 인원들이 돌아와서 일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정애 위원** 창원공장의 경우에 엔진공장 2개 라인이지요. 디젤공장은 풀로 가동되고 있고, 풀로 가동되는 것의 인원이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젤공장까지도 사실은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450명이 아니라 600여 명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다, 풀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쌍용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번에 복직되는 무급

휴직자가 일부는 창원공장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창원공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디젤공장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한정애 위원** 거기는 2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잡 수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금 노사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노조는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복수노조 생기고 사측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요. 복수노조 생기고 대표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별 노조하고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측이 하려고만 하면 한진중공업지회하고도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 것인데……

사측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동부에서도 한진중공업지회와 사용자 측이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얘기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좀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라도 합의점이 찾아져서 빨리 유가족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좀 되고, 실제로 장례를 빨리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손배와 관련한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부 역할이 그런 것이 잘 진행되게끔 조력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 건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끝나서 그러는데 한진중공업이 기업노조가 이전에 양 노조와 사측과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신계륜** 노동부에서 이 사태가 새로운 사태이기 때문에 사측과 노사가 좀 협상과 교섭 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좀 바람직하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마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진 성격을 떠나서 이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나쁘

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다음에 쌍차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공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실제 정리하고 된 사람 중에서 아직도 의견이나는 현장에 복귀해서 일해야 하며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의지를 표명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내 직장은 쌍용자동차이다, 다른 데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요.

난 그게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지, 그런 분들의 숫자,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 희망퇴직자가 1900여 명이었고요, 경영상 해고자가 190여 명이기 때문에 그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보기에 159명인가 160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사,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대선 후여서 여야 간에 좀 약간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기운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런데 어쨌든 질의는 필요한 일어서 질의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자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식사 잘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아주 잘 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괜찮으시면 서용교 위원님이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김성태 위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를 서용교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들인데, 정치권이 개입해서 제대로 해결된 선례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와 사가 안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리해고 자체는 없앨 수 없겠지만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는데, 당장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향후 지원계획 항목을 보면 내일배움카드, 취업알선서비스 안내 등 이런 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나 일반 구직자들한테도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됩니다만 쌍용차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맞춤형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도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와락 등에서 시행하는데, 고용부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두 가지입니다. 고용부가 직접 EAP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주로 무급휴직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와락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된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살을 시도했던 분 보면 지금 쌍용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조립 2라인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쌍용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정

리해고자나 무급휴직자를 중심으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에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아왔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향후 지원계획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지원되는, 쌍용차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더 특화된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향후 지원계획 중에 꼭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게 455명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노갈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확인을 했지만 복직된 지 수년간 지났는데도 서로 간에 비난이라든지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쌍용차처럼 격화된 투쟁을 겪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황인데요. 비록 무급휴직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편치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좀 더 넓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하고 합쳐서 11대 관용차를 구매하면서 8대를 쌍용차로 구매했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됐지만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것들이 쌍용차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국무회의 석상이라든지 전체 자리할 기회가 있으면 널리 알려 주시고, 특히 쌍용차가 경찰청을 비롯해서 몇 군데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한번 편하게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서용교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고공·철탑 농

성을 보면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아직도 개인의 극단적이거나 희생적인 투쟁 방식이 우리 노동운동의 주요한 한 방법으로 아직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성하는 그런 느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 정리해고라는 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됐다고 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 정리해고 자체를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경영상 해고는 기업경영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 없이 꾸준히 커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굳건하게 돼서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과정 관리상 경영상 해고가 자체되는 것은 좋지만 아예 없게끔 한다면 자유가 과연 부여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결부된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경영상 해고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극히 최소화하되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보완적 운영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교 위원** 일단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상의 필요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뭘니까 공정한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여럿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법을 보완하든지 각종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라든지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공 농성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시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자나 약자가 생계 안정을 이루어가면서도 재취업이나 전직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다음 생계 수단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정리해고에 관한 각종 요건들 네 가지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범한 사례들을 한번 수집하고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다 정리해고 사업장이 아니니까,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빼 놓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어떤 경직성이라든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된단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보면 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고 자체는 없앨 수 없겠지요. 그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존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누구나 승복하고 따라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더욱 연구라든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법조문은 있으니까 이 법조문에 대해 지켜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더 이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라든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하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의 경우에도 어떤 법적 명문상의 요건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운영하기보다도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경우에도 종전에 판례로 인정된 것을, 그것을 규정으로 명시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반면에 저희들 정부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꼭 불가피한 사정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남는 자와 떠나는 자 간의 극단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용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요건상 그런 점점을 튼

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우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가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께서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뭐 의견이라고 하지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무급휴직자의 복직만을 위해서 저희가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실지로 정리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의 어떤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리하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저는 이 쌍용자동차야말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 혹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하고나 구조조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쌍용자동차는 회계를 조작해서 기획 부도를 했다, 이것이 명백하게 여러 가지 증거가 확인이 되었고, 저는 사실 관계도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시간이 너무 짧고 이래서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만 벌이다가 만 셈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켜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이 정리해고의 문제입니다. 정리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지역사회…… 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쌍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

든 것이 백화점식으로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고용시장의 문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국회가 못 한다면 저는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최종적으로 입법하는 기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특히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인데 국회가 자꾸 나선다, 이런 식의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죽 제 나름대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저에게, 주무장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제가 답을 한다면 현재 지금 시기에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득도 있지만 실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저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생각인 것이, 회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일부는 내려졌고 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동시에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를 만난 제 느낌으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경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다는 그런 점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상 지금은 걱정이 더 많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장관님의 그런 철학과 시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자본 편에 서는 겁니다. 뭐, 저는 그것 좋다고 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쌍용차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쌍용을 인수한 마힌드라 그룹에서 제대로 투자 안 한 것이, 이게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쌍차에 대해서 마힌드라가 인수한 이후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투자 안 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R&D 같은 것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꾸 잃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안 한다고, 국정조사 안 하면 경쟁력이 바로 생깁니까? 저는 엉뚱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쌍용자동차는 회계조작이나 기획 부도, 이게 저희들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진상이 밝혀지고 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지금 몇 년 동안 23명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저는 우리 경제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노사 간에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왔더라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어떤 불법, 그리고 잘못된 정리해고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까지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는 환노위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선 때 잠깐 선거에 필요해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는 해고자들로 봐서는 지금 새누리당 태도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는 다행히 새누리당의 김성태 간사님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주시고 환노위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대선 끝난 지가 며칠 됐다고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환노위에서 결의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채필 장관님께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더 질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환노위를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장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

다. 그런데 저는 법과 원칙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노사관계는 자본 측의, 경영 쪽의 어떤 불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용역 사태를 비롯해서 한진중공업, 쌍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머지 유성,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노동 현안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부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해서도 조정하고 또 뭔가 진상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좀 하는 척하셨지, 저는 제대로 노동부가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뭘 하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저는 처음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나 고용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람이 죽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문제를 국회로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사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항상 다루어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한편으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정말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법을 지키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친자본이라든지 자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사업주를 구속하고 압수 수색 많이 한 사람 없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쌍용차를 구성하는 노동조합과 회사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쌍용차 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과정이겠습

니다만 국정조사를 해서 쌍용차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가 된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겠다고 하신다면 무슨 결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합니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관께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참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일이고, 여야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당선자까지 약속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에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장관님 허락받고 국정조사 합니까?

정치공세 이야기 아까 새누리당 위원님들 하셨는데, 누가 정치쟁점화를 시켰습니까? 집권당과 대통령당선자가 약속을 취임도 하기 전에 뒤집는 게 정치쟁점이 안 되면 뭐가 정치쟁점이에요, 그러면?

또 경영정상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아니, 선거 때는 경영정상화 걱정 안 되셨어요? 갑자기 선거 끝나니까 경영정상화 생각이 나신 겁니까?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해고자들이 회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해고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야 복직이 되니까.

그리고 정상화의 핵심은 투자입니다. 마힌드라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나마 국회가 관심 갖고 청문회도 하고 또 국정감사도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정조사는 바로 쌍용자동차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정치의 시험대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인수위원회에 노동이 없어요. 고용복지분과라는 게 있는데 경제 전공하신 분 한 분에다가 복지 전공한 분 두 분이에요. 그리고 법질서안전분과인가 있는데, 혹시 노동은 법질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자리에 김성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노동 담당 정치인들

이 많으신데 왜 노동은 한 분도 인수위에 배정이 안 됐는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듯 심각하고 노동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고려가 이 정도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생에는 노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깊은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새 정부 인수위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꼭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고용복지분과의 안정법 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예전에 맡아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심상정 위원** 아니, 이래저래 걸친 분들이야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전문성이 그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나름대로 또 우리 부에서 나간 전문위원은 노사관계 분야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따가 또 오후에 상임위원장께서 토론과 의결 시간을 따로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유성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 보겠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한 경우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의 결격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회사가 노조를 설립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상정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의미상 말하자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정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마는 현재 노동관계법상의 요건으로는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심상정 위원** 예, 그래서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용자의 경비가 원조된 경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등등 이런 경우 인데요……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유성기업 제2노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셔서 설립 필증을 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요건상으로는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쟁송을 노조에서 제기를 해서 내 놓은 상황입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장관님 법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질의하는데 사법부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문제를 삼아 냅습니다.

○**심상정 위원** 작년에 국정감사 때 창조컨설팅의 노조 설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불법 부당한 가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입증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작년 12월 3일 날 중노위 판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서 신생 노조 가입을 수차례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정했는데,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판정은 잘못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창조의 부당한 가입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 아니, 중노위의 이 판정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창조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중노위 제기된 사건은 중노위가 판정한 대로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사건이 제기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자꾸만 딴 데로 빠지 마시고, 대한민국 노동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지금 중노위가 법적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중노위에서 판정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 근거까지 들이댈 필요도 없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판단하고……

○**심상정 위원** 장관님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 유성기업의 그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이라는 데는 어떤 경영상의 애로도 없어요.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회사도 잘 경영되고 있는데 오직 노조 파괴를 위해서만 500억을 쓴 회사예요, 오직 노조 파괴를 위해서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불법 부당한 가입 근거를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회사가 만든 노조를, 회사가 지원한 노조를 필증을 냈으면 잘못 필증을 낸 거지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증했으면 당연히 설립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정감사 지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노동조합법 몇 조입니까? 시행령 9조2항에 나와 있잖아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는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배 썰라’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심상정 위원** 아니, 취지가 아니고요, 내용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불러 드릴까요? 중노위에서 또 어떤 판정을 했는데, ‘김웅 과장이라는 사람은 노동자 이학선에게 만남을 주선하면서 정년퇴임까지 일하고 싶으면 신생 노조에 가입해라’ 이것을 중노위가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 노조가 정상적인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 노조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 국회에서 입증하고 중노위에서 그 근거를 대고 했는데도 장관만 버티고 계신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창조컨설팅이 법을 위반한 것은 그거대로……

○**심상정 위원** 아니, 창조컨설팅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심상정 위원** 창조컨설팅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또 회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유성기업의 제2노조 설립 취소를 하시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노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사용자가 만든 조직을 노조로 인정하는 그런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합원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합원이 노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심상정 위원** 장관님, 제가 더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행법상 요건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이렇게 막 가면 안 됩니다, 노동부가.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수많은 기업주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골치 아픈 노조 없애 버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다 사용자들이 노조 파괴할 목적으로 제2노조 만든 데가 많은데,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성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회사 필요, 경영상의 필요가 요만큼도 없어요. 잘 나가고 있는 회사예요. 노사관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직 노조 하나 깨기 위해서 500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 근거를 노동부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근거를 다 입증했고, 중노위에서 이런 판정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장관께 정말 퇴임하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에 이 문제 하나만큼은 노동부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여러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쌍용자동차 또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산업현장에서 참여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시회, 국회는 폐회 중이지만 긴급하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이런 산업현장의 현재 심각한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또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으자는 그런 의미로 이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사업장의 문제들이 이미 어느 정도 환노위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인 만큼 그동안 해 왔던 이 문제 제기나 또 공방을 소모적으로 더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도 우려와 걱정을 아끼지 않으신 그런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에 충분히 귀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노동기본권이 바로 서야만이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현안별 쟁점을 간단히 묻고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노사 간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정규지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지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이제까지는 비정규지회와 연대하고 협조적이

었는데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지회에 대한 농성 지원을 중단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측과 정규직 노조 그리고 사측과 비정규지회 사이의 교섭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공식 협의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지회 중단도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사교섭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어떤 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무래도 사내 도급업체에 있는 분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직원 채용공고가 나와 있고 현재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80% 정도가 직원 채용공고에 희망한 이런 상황임을 볼 때 비정규지회 노조 지도부도 조합원들의 여망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슬기로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식·비공식 그런 교섭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대차 회사는 앞으로 3500명을 원래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노동부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현대차 방문해서 교섭 재개와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전환 시기를 단축하는, 그리고 규모도 늘리는 그런 강력한 정부 요구를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는 현대차에서 3000명을 201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인원이 적다, 더 늘려 달라, 시기도 당겨 달라고 그랬더니 3500명으로 하되 2015년 이전에 1750명, 늦게라도 2016년까지 나머지 1750명 해서 3500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추가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이 비정규지회에서는 일시에 전원 정규직화와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채용을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 비정규지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우선 법적 쟁송은 쟁송대로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

다리는 것은 노사 모두가 굉장히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뽑아가면서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진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손배가압류 같은 경우 노동계에서는 2011년도 11월 달에 노사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측과 지금 상당히 의견 차이가 커요. 고용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한진중공업이 2011년도 노사합의사항을 얼마나 이행하였고 또 어떤 부분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진중공업의 손배와 관련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종전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 문제하고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는 다 취소를 하고 현재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한진중공업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현재 손배가압류를 넣은 게 158억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금 더 됩니다.

○**김성태 위원** 얼마나 더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머지 합치면 한 160억가량 청구된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얼마가 될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봐야……

○**김성태 위원** 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게 1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는 판단해 봐야……

○**김성태 위원** 자, 그러면 이 160억에 달하는 이 손배가압류 청구가 한진중공업 회사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게 2011년도 분쟁해결 이후에 사실 개인적인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는 없다, 안 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동조직을 상대로 손배가압류 160억 넣어 버리면 앞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손배가압류 청구 규모가 노조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요구한 것, 청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 대해

서는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손배 청구를 할 때는 흔히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마는 피해에 따른 청구는 있을 수 있지만 노조활동을 옥죄기 위한 손배 청구는 적절치 않다,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채필 장관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산업현장에서 때로는 노사 간에 분쟁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그 분쟁 갈등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노조 조직을 상대로 근본적인 노조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손배가압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청구하는 것은 산업현장 평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배가압류 규모를 앞으로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준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생기더라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 되는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실제 청구액이 얼마나 인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조에서는 최종적인 금액이 160억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오늘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를 하면서 국회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상임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내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나 또 노동자들이 이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대선 이후의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이 지독한 절망감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설부른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현장에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대적

으로 지난 대선 공간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지 못하고 또 개별 사업장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노동조합 간부들도 이렇게 참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편견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현장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인식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갑작스럽게 잡히게 되었던 것은 작년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이은 근로자들의 죽음, 연쇄적인 자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필요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작년 대선 이후에 몇 분의 근로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장관님 이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높아진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좌절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상당히 복합적인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각각 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원인을 제가 질문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던가?

결국은 뭐냐 하면,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생활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지금의

처한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낱같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기 사업장의 문제, 지난 수년 동안 겪어 왔던 산업현장에서의 고충들 그리고 그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왜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가, 그런 희망을 왜 가질 수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로 오늘의 회의도 이렇게 열렸는데, 오늘 노동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답변하신, 국정감사나 그전에 청문회 때나 답변하신 큰 틀에서 크게 변한 게 없구나,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대응하는 게 너무 안이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때의 대책에서 제가 지금 대책이 얼마나 좀 달라졌나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한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장관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국정조사가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김경협 위원** 영향은 미칠 수 있지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장관님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왜 국정조사까지 거론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모든 그 회사의 문제, 물론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사문제에서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 자율에 맡겨 놔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해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온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쌍용자동차?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대단히 장기화돼 있고 노사 자율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노동부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든 조정하든 지도하든 해결책을 내놔야 했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국정조사까지 넘어오고 정치권까지 넘어옵니까? 안 됐기 때문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물론 장관님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적절하냐 물어보면 먼저 해야 될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까지 오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부에서 당연히 해결하도록 했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신 내용 중에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안 해도 될 만큼의 노동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조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없거든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하시는 얘기가 ‘국정조사는 부적절합니다.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장관님이 하시는 게…… 그러면 경영정상화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제시를 하시든지 안 해도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대책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하시는 얘기가, 지금 장관님의 그런 발언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정적이고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쌍용자동차 청문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9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요? 환영할 일이고 ‘아,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해 가면 쌍용차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한번 9000억 원 신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입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오도록,

정치권까지 오도록 만들었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그나마 청문회나 지금 현재 국정감사 통해서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9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입장,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무급휴직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물론 금년 1월 달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됐지만.

정치권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접어 놔두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회에다 하는 얘기가 차나 팔아 달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국회가 이런 데 개입하지 않고 쌍용차나 갖다 팔아 주고 있으면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쌍용차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상의 어려움 탓이지요, 그 경영상의 어려움 탓을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적 개입이 오히려 마힌드라사의 투자를 과연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마힌드라 과완 고엔카 회장이 이렇게 해서 9000억 원 신규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조치로 지원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가, 9000억 원 투자는 진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노동부에서 확인하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규 투자금 9000억 원의 세부 투자 계획, 회사 정상화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2200명의 복직 계획 등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나서면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정

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도 다 ‘정치권은 뭐하고 있느냐? 왜 손 놓고 있느냐?’ 이런 지적과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정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정치권도 안 나서면 해결 대책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쌍용차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큰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결정이고요. 이것도 역시 저번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가 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 할까 봐서 솔직히 말해서 회피성으로 무급휴직자 복직 계획을 일단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국정조사 계획이 전혀 거론조차 안 됐으면 무급휴직자 455명 복직 계획 발표했을까요? 이게 하나의 뉴스거리였고요.

또 하나는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해서 9억 달러, 약 1조 원 투자한다는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국에 있는 쌍용차에 9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 자국 공장에 마찬가지로 9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쌍용차는 2016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인도 자국 회사에는 201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2년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로이터통신하고 머니컨트롤의 보도입니다.

그다음에 9억 달러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완 고엔카 회장이 필요하다면 마힌드라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쌍용차에 투자하는 금액은 쌍용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대출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외부 차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마힌드라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쌍용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쌍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016년까지. 이

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상하이차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마무리하세요.

○김경협 위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힌드라가 9000억 원이든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미래, 2016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아 놓고 내지는 자체 내에서 잉여금으로 대출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디선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경영정상화 계획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정조사가 기업을 못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경영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내고, 계획을 확인하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국정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쌍용자동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선 전에 이게 하나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저는 요즘에 공약을 어겨야 한다고 하는 아주 회한한 언론이나 다른 데 보니까 요구들이 있던데 저는 약속을 어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약속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뢰와 약속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그동안의 아직까지의 정치 일정이었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셨나요?

○이완영 위원 2013년 새해 첫 상임위가 열리면서 먼저 여야, 노동부, 생산적이고 좋은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새해 첫 질의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우리 첫 상임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 저의 각오가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정말 어느 상임위와 달리 우리는 잘해 보자는 결의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다 더 금년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위원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저는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민병두 의원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민생입법을 민주당이 만들자’ 이런 얘기 그리고 정대철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니지요, 정대철 고문님은 ‘중북 좌파와는 민주당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고, 반성 없이 이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희망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야가 많이 협력할 것은 하고요.

저는 아울러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부 공무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가 왔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국회가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일자리와 노사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침 아침에 조금 늦게 왔는데, NATV에서 김태기 교수, 이병훈 교수 등과 함께 이런 문제를 새 정부에…… 내일 아침 9시에 방송합니다. 공무원들도 한번 보시면서 새 정부가 추구해야 될 게 뭘지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신 것, 위태로운 고공농성, 자살 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이 현실에 정말 저도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환노

위 위원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처음으로 1월 1일 통과되어서 이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쌍용차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쌍차의 경우 우리 여야정이 좀 더 생산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반드시 국조만이 길인가, 국정조사만이…… 그러면 서로 이견이 있다면 꼭 이런 질의응답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따로 앉아서, 장관님하고 여야가 앉아서, 정말 살리고 진정하게 쌍차를 위한다면 새로운 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질의 형식으로 하니까 서로 딱딱해지고, 또 장관님하고 서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식이 되는 것 아닌가, 운영의 그런 것도……

또 분명한 것은 쌍차 국정조사가 박근혜 공약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어떤 우리 당직자가 얘기하셨거나 이런 것이지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도……

○김경협 위원 총괄선대본부장님이……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니고요.

○김경협 위원 황우여 당 대표님의 발언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점을 먼저 아울러 말씀도 드립니다. 드리고요.

○김경협 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어요. 확인했어요.

○이완영 위원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계속 야당 위원들로부터 친기업·반노동자 정책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오늘도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장관님은 말씀을 하시고, 저도 부당노동행위 처벌이라든지 체불임금 처벌 이런 게 어느 장관님 때보다도 많았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께 배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할까요?

○이완영 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다, 그래야만……

장관님 억울하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노동행정을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왜곡되게 인식이 간다는 것은 좀, 그런 면에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돌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내하청 근로자가 비정규직입니까? 한번 여쭙어 볼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 법적 의미는 아닙니다만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결국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정규직은 분명히 아니지요. 왜냐 하면 단기간근로자하고 파견근로자만 비정규직 관련법이니까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비정규직 차별 시정으로 보기에 사내하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지금 사내하청의 최병승 씨가 정규직 발령을 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회사에 대해서 엄청 다그쳤는데 늦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냈는데 혼자서는 못 내려가겠다 해서 안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본다면 고용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좀 지켜……

○이완영 위원 다툼이라는 것은 사법적 다툼이라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수사가 또 마무리되지 않은 면이 있고,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나 최병승 씨 것을 기준으로 봐서 노동부가 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최병승 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한 것이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최병승과 유사한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인식을 같이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사법적 그 판단이 끝나 봐야 고용의무 부과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 끌기보다는 먼저 정규직 채용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모두에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인수위에서 있었던 노동부가 보고한 것을 보면, 정년 60세 보장 관련해서 중소기업부터 하자는 보고를 했나요? 그런 게 기사가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이완영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모든 게 대기업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정년 연장은 중소기업부터 하자, 이런 보고를 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수위 보고 내용에 중소기업, 대기업 먼저 이런 것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자들이 추측성으로……

○이완영 위원 그러면 노동부 실제 보고 내용은 뭔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완영 위원 어떤 단계적인 것을 노동부가 얘기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짜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고를 얘기하시니까 보고서상에 구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단계적은 뭘 염두에 두고, 기업 규모별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인수위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수위 보고서상으로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기사가 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기자들한테 여쭙어 보셔야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기자들이 아니라 인수위원들 간에 노동부의 보고에서 논쟁이 심히 있었다 이런 게 기사가 났잖아요?

장관님, 그런 문제 기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앞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보고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는 기사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중소기업부터 하자 그러는지는, 노동부 안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부터 또는 공기업부터,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판단한다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인력 부족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것은, 즉 현실성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마트는 지금 조기에 특감을 들여간다는 것은 매우 잘한 조치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감독도 제대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거나 아니면 어떤 결의를 하시자는 취지가 야당 주장 같은데요, 제가 관련법을 보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본회의에서 요구하고 그것은 또 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할 일이고 한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의 충분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채택 여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안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또 민주당 전체 위원님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했고, 국정조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바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서를 내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의논할 때 그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서 질의나 답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다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듯한 생각도 듭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저는 말 한 마디만……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시겠나요?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까지 다섯 분 질의를 원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국정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은수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제가 모두발언 때 말씀드린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문제 그리고 노조 파괴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메시지가 하나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미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 불법과건은 8년간 계속된 겁니다. 8년 이상 계속됐고,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거의 3000일 정도인데 현재의 법원이 3000일 정도나 지속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

장의 불법과건에 대해서는 매우 무력합니다. 반면 오늘로 94일째 송전탑에서 목숨을 걸고 불법과건에 항의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은 아주 신속하여 오늘로서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2시 30분 용역 200여 명이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약 1시간여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심상정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이러한 강제집행을 불법과건이든 여러 논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 줄 것을 사실 환노위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동시에 현대자동차 불법과건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사과 및 전향적 조치의 촉구를 다시 한번 환노위 차원에서 결의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문제입니다.

잠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가 불거진 것은 사실은 한진중공업 회장께서, 사용자 측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 이후 당시 2011년 11월 9일 노사합의서 4항을 보시면 ‘형사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노사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지부와 지회 및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하기로 한다’라고 당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서 개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취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부와 지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최소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부에 대한 이 손해배상은 조합 간부가 연대책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거나 취하하지 않으면 조합 간부가 그것을 연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행 법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문제는 사용자 측이 청문회 및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아주 심각한 불복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역시 저는 촉구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보시면 한진중공업은 손배가압류를 매우 잘 이용한 기업입니다.

91년부터 시작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당시는 7200여 만 원을 손해배상 가압류를 했다가 2011

년 드디어 158억 플러스 1억 원 플러스 1200여 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손배가압류를 반복적으로 노조 활동이나 개인에 대한 위협용으로 사용돼 온 매우 악질적인 자본일 뿐만이 아니라 이 손배가압류가 최근 다른 사업체에서 노조 파괴에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환노위에서 밝힌 KEC, 상신브레이크, 3M, 발레오만도, 진방스틸, DKC, 보쉬전장, 유성기업, 만도지부, 이렇게 노조 파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가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취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예.

환노위에서 촉구하는 것은 노조 파괴를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더불어 쌍용차 국정조사 재촉구 결의안까지 환노위에서 오늘 결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가 되어야 경영정상화가 됩니다.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지금 마힌드라가 투자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마힌드라가 투자한 적 없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5년까지 쌍용에서 지금 4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신규 투자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쌍용차 자체 잉여금과 그다음에 심지어는 노동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급까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마힌드라는 단 한 푼도 투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힌드라의 투자를 실제로 담보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5분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 각종 언론에서 이마트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노무관리 행태에 대해서 공중파를 비롯하여 많은 매체가 다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2011년 7월 2일에는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에서 냉동기를 보수하던 노동자 네 분이 질식사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시립대 학생이 또 1명 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일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탄현점 지점장이 벌금 1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산재사고가 단 100만 원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나온 것이 좀 더 어두운 과정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가 노동부 공직자들과 심각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문건이 있어서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들과 장관 이하 노동부 공직자분들하고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 화면은 이마트 직원들끼리 사용하는 내부망에서 그대로 캡처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단 총무팀에서 금번 사고의 대응을 위해 중부청을 통해서 산업안전 전문 노무사를 추천을 받았다’, 내용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산재사고가 이마트에서 났는데 이 처리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노무사를 중부청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아까 같은 회사 내부망에 있는 문서 그대로입니다.

작성자는 본사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강모 파트장이 작성한 문건이고요, 날짜는 2011년 7월 11일입니다. 사건에서 한 일주일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산재예방과 미팅을 했다’, 거기 김석윤 과장은 당연히 노동부 공무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마트가 유가족과 직접 협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트레인코리아는 아까 말했던 냉동기구 설비업체 인데요.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최소 세 차례 실망감을 안겨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의적으로나마 장례식 비용 정도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컨설팅을 노동부 직원이 이마트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같은 날 메일입니다.

위에 보시면 일단 이마트 사고조사 담당 감독관 이종태 팀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원인이 ‘지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장—아까 앞에서 나온 김석운 과장인데요—명령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지청장은 ‘지점장에게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도중에 김석운 과장이 이것을 무마시키려는 기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도 멋진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본인이 산업안전감독관 경험이 오래인데 일단 이마트의 대표자 불구속 기소 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마트에 책임이 없으므로 법적 대응으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아까 노무사 선임 관련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개선 1과 여균호 팀장이 노동부 본청 소속의 전문 노무사를 아까 강모 파트장에게 소개하였으며 본사에서 대상자를 물색 중이다, 그리고 맨 밑에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가 막힌데 ‘노무사 윤모 씨를 선임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이마트의 산재사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것을 사실상은 너무 구체적으로 저렇게 컨설팅을 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현재 김석운 당시 산업안전감독관, 과장은 현재 중노위 심판1과에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홈페이지를 캡처한 내용인데 현재 지금 중노위 심판1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물론 조사해 봐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먼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있는지 지금 감사실에다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엄정하게 감사해서 백벌백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노동부 본청 전문 노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저도 아무쪼록 실체가 없는 사항이었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가지……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늘 지난 7, 8개월 동안 환노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노사자율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가 할 몫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노동부장관인 국무위원께서 국회 본청까지 오셔서 앞에 말씀하신 소위 정치인인 환노위 소속 위원들을 앞에 두고 개입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인, 심정적인 불쾌함이 아니라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상 언제 다시 벌지 몰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온당한 문제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데 사실상 아까 손배소 부분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손해액에 근거해서 산정을 한다, 그걸 어떻게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아무리 기업이 존속을 해야 하고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고 해도 만약에 부당해고이고 그걸 통해서 피해 받은 우리 노동자들

이 있다면, 그리고 복직이 늦어져서 임금체불이 된 그런 부당함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경영정상화와는 무관하게 일단은 법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손배소가 탄압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면들이 이미 국감에서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화를 하면서 참 적응하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노동부장관 답변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새누리당의 이완영 위원님의 발언 중에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얘기입니다만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과 철학은 각 위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은 반노동정책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차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완영 위원께서는 그런 반노동정책이 사실이 아니고 좀 부당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그런 질의를 자꾸 받으니 노동부장관은 억울하지 아니한가, 그런 억울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모든 위원들에게 다 배포하시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장관께서는 저에게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끼리 자신만의 노동에 대한 시각을,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한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한정에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여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한정에입니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장관께서 이걸 특별감독, 특별감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자로 난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실시한 그 방식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그 방식은 신세계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차원에서 신세계그룹사 전반에 대해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워크숍 교육을 2011년 6월달에 한 일주일 정도 실시를 했고 거기도 물론 당연히 이마트가 참가를 했지요. 그리고 신세계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일정 부분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실은 충실하게 이마트가 그 방식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한 곳은 신세계그룹이지요, 모기업. 그러면 이마트만 조사를 해서 될 건 아니고 신세계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특별감독을 진행해 가면서 혐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할 것입니다.

○**한정에 위원**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연하지요.

○**한정에 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몇 개 회사, 지난번 우리 청문회에서도 유성기업 같은 데서 진행되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를 끝내겠다고 그때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사측도 여전히 아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물론 노동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이런 수사, 특별감독한 것에 대한 결과들,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별히 이번 이마트와 관련된 신세계 연관 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빠짐이 없이 노동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혐의가 있으면’이라고 하면 이 혐의를 찾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러면 더 빨리 되고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인지수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당노동행위를 하게끔 지시를 한 원천적인 기업에 해당되는 모기업인 신세계가 거기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지를 해도 정보가 나와야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한정애 위원** 노동부는 당연히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 다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도 질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이 좀 있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5년 내내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게 사측에 대해서도 좀, 경영진에 대해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좀 편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 불산사태 이후에 일제 점검을 그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정감사에서도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청주 지디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불산이 누출되어서 이미 그 근처가 환경오염이 되었고 우리가 녹아내리고 식물이 괴사하는 등 이

런 작은 누출 사건이 몇 번씩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담당 국장이 보고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예, 그러면 문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시는 김에 상주 웅진폴리실리콘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짧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정부합동점검 차원에서 한 200개소를 위험한 물질을 추려서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불산하고 염산 누출이 나왔던 상주와 청주의 회사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상주는 먼저 PSM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 대상이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지디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불산 취급 사업장으로 파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2009년도 조사 때 왜 불산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조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들어가십시오.

○**한정애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한정애 위원** 지금 문제가 지디 같은 경우에는, 지디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습시다마는 도대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면 고용노동부는 연락을 받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그 뒤에 사업장을 점검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가동 중지가 된 상태이기는 하나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재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반드시 정밀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쨌든 재가동이 들어가야 된다고까지 되는 이런 결과물들이 왜 공유가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러니까 가동 중지 부분은 아니고 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애 위원** 대응 과정에서 연락을 못 받은 것도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집행기구들 아납니까? 정부가 지자체도 그렇고 지자체에 있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지자체가 가서 적용시키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가지고 MSDS 지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지난 구미 사고 이후에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연락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모든 사업장의 사고를, 180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사고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욱 공고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기분이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고 4년 동안 밖에 있다가 19대 때 국회에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참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어요.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기자들한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대충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큰데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물을 권리와 책임을 갖고 묻는 것이고 장관은 국회에 답변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방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또 국민들에게 답변하

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국회의 권위와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그런 노력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관께 묻겠습니다.

수능 문제에 오답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면 그 한 사람만 시정됩니까? 어떻습니까? 오답 처리에서 그 한 사람만 구제됩니까, 다 구제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심상정 위원**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오답이 확인이 되면, 승소하면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구제됩니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최병승 씨가 무려 7년 만에 대법에서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이미 그 7년 전에, 2004년도에 노동부에서 노동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불법파견의 내용을 노동부의 권한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90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가 힘이 달려서, 행정부가 힘이 달려서 대기업한테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면 행정부로서 그 법의 이행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은. 그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재판 결과 나와 봐야 안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올라가 있는 분이 적법하게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 강제집행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이 정부하고 정치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법의 이행과 관련된 책임 있는 대책을 노동부가 좀 내놔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한진 문제인데, 장례는 치르도록 해 줘야 되지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장관께서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조합원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데는

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동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제가 반평생을 여기에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손배예요. 2003년도에도 똑같은 양상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당시에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김주익 지회장도 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이 클는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때도 노사위원회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하자,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가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만뒀어요. 입법례를 외국에서 찾으시려면 기업별 노조 차원의 쟁의 과정에서 100억대 이상의 손배가압류를 하는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이 손배가압류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나서서 대타협을 할 때 최소화시킨다는 약속이 있었고 지금까지 전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배를 집행한 사례는 그닥 안 많습니다. 다 노조를 탄압하고 또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노동부가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나서고, 한진중공업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권고했던…… 재 권고를 통해서 이번 사태도 좀 해결되고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아까 신청하신 분들 다 마쳤는데……

○이완영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성주·고령·칠곡의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건간에 새해에 들어서면 국민들이 뭔가 삶의 희망을 갖고 있고 기대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더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안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적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청근로자법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빨리 우리가 법안소위라도 진행을 시켜서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가 유지해 온 것은 노사 자율 해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회에 오시면 '뭐 하나, 현장도 안 나가 보고?' 이런 질타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 2010년, 2011년도에 분규는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한 사업체의 분규가 늘어나고 있다, 그 분규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저는 노동부에 근무하면서 노사문제를 오래 하면서 사실 참여정부 초기에도 자살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 중재자로서 직접 나가 가지고 정말 자살을 예방했다는 그런 자부심, 보람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사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자율이지만 무작정 노사가 팽팽하게 달리고 있다면 공정한 정부의 중재자가 나가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분규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새 정부하에서는, 제가 볼 때 자율에만 맡긴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위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배 요구를 하고 악순환만 거듭된다, 노조는 법 테두리 내의 분규를 하도록 나가서 제대로 지도도 하고 또 사측은 자제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오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갈 수 있고 분규를 줄일 수 있는 데 저는 노동부 감독관이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정말 특히 대형 사업장, 현대자동차 하루 파업하면 손실금액이 얼마입니까? 몇백억에 달하는데 그것을 우리 노동부가 들어가서 하루라도 분규를 종식시킨다

면 저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쨌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율에 맡겨 보고…… 지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선부른 정부의 개입에 따른 중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 돼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푸는 훈련이 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분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선부른 개입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필요한 조언, 교섭, 지원 이런 것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매년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분규가 어느 해보다도 늘어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에 아마 노동계의 요구 분출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규에 대해서 장관님이 ‘선부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설불리 들어가면 안 되지요. 충분히 검토하고 시기와 딱 맞춰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설불리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뭐랄까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먼저 하고 계시니까 그런 용어가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특히 금년에 분규가 우려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홍영표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한 158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에. 개인에 대해서는 취하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한진중공업 노조조합비가 1년에 한 1억 내외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노조에 책임을 물었을 때 그 노조 전체 조합비의 158년 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158년 동안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비유지요. 피해를 얼마나 끼쳤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나오는 것이고 노조의 재정이 어떻느냐에 비례해서 손해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피해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게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청구액을 최소화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최소화시키는 합의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그런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뭔가 그런 게 이행되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노동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선 한 가지, 하여튼 빠뜨린 말씀 우선 하나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청문회를 통해서 회계 조작 의혹 문제나 생산성지수(HPV) 조작 의혹 문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정리해고의 근거였지요. 그런데 정리해고의 근거로 하기에는 회계상의 문제나 생산성지수에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을 왜곡시킨 면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 설령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발표를 했더라도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복직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경영정상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외신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는지 지금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게 지금 마힌드라가 자국 내에 2년 동안에 9억 달러를 투자하고 한국 쌍용차에는 4년 동안에 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게 4년간 2016년까지

이렇게 가는 계획인데 그 자금 마련도 사실은 마힌드라의 자본을 투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쌍용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대출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외부차입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겠다 이라고 있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쌍용차에 있는 돈 가지고 다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계획대로 실제로 이행될 것인가, 이행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쌍용차가 이런 투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투자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구요.

이것이 역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조속히 경영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선 전에 이미 공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대선 전에 이미 국정조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정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물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히 국정조사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실제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조만간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노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이 회사가 잘못되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취지였지요.

○홍영표 위원 ‘위원님이 책임질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정조사를 해서 회사 살리기가 어려워진다면, 책임지신다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라고 했지요.

○홍영표 위원 제가 오늘 사실 장관님하고 얘기할 이럴 시간도 많지 않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정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노동행정, 노사관계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어서, 저는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드러난 것만 해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저도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어야 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잘해 나가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용자동차처럼.....

저희가 국정조사를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회계조작을 통해서 기획부도를 통해서 만들어 내고, 이것은 어떤 기업이든 한국 경제든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장관님의 시각은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든 말든 하여튼 기업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하고 이것 자체를, 그 자체를 저는 반대하시는 사고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기업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홍영표 위원** 저는요, 저한테……

사법적 판단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도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저는요 좀 정중한 사과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고, 국정조사로 인해서 빚어진……

○**홍영표 위원** 사법적 판단만 하더라도 쌍용자동차의 회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입니까? 대법관, 대법원장이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 못 들었어요?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판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발언한 것 못 들으셨습니까,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류 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아니, 그 판결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의견도 감안해서 하겠지요.

○**홍영표 위원** 하여튼 사법부 판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쌍용자동차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국정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불법부당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주장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좀 받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결과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그것은 장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예요, 아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 자, 한 획도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한 자, 한 획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영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회사 경영정상화에 방해하는 겁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뭘니까? 국정조사를 그래서…… 그런 결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 하시잖아요.

국정조사 하면 회사 경영정상화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런 불법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냥 기업정상화를 위해서 다 눈 감고 덮어 주고 넘어 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부장관으로서 해 오신 소신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지요?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국정조사는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사가 망하면 위원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장관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장관님은 국무위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대국회 관계

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아마 고용노동부에 대한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편의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커피점, 주유소 이런 쉽게 말하면 청소년 취약노동자가 많은 9개 업종을 약 1008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의 35%가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훨씬 낮은 시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 드러났어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임금 착취이고 또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이런 단시간 근로자들 같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금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가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정말 각별한 보호대책을 고용노동부가 확고한 의지로서 좀 현장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현장근로감독 나가면 정말 사업주가 큰일 나고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이런 청소년들 알바 그냥 막 이용하고 이런 것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확고하게 불러일으켜 주실 그런 근로감독 실태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 작년 연말부터 좀 강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사무실에 신고하면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고하면 처리할 수 있게끔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 앱도 개발하고 또 전화로 1644-3119라는 것으로 해서 신고하고, 담당하는 전담 감독관도 연소자 친화적인 감독관으로 시정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효과를 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더 특단의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실상 이런 청소년이 정말 아주 실망하고 정말 좌절하면서 본 위원에게 이 부

분에 대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처리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실태가 정말 현장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18살의 고2 청소년이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바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이 청소년 단기 근로자들 알바 근로 부당실태를 고발해라 내가 바로 조치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특단의 의지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잘 경청했습니다.

집권당 새누리당의 환노위 책임자로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대선 공간에서의 약속 즉,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쌍용자동차에 관한 입장 분명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에 지난 1월 11일 쌍용자동차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무급휴직자 455명이 복직하고, 앞으로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들 문제도 쌍용자동차 노사 간에 앞으로 경영 상태가 정상화되고 회복 여건에 따라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노사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쌍용자동차 노사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제 새누리당 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원내에서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오늘 저는 새누리당의 환노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지난 대선 공간에서 새누리당이 한 그 약속 존재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런 야당 위원님들의 요구를 이한구 원내대표님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의견을 전달하고 저도 우리 위원회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질의는 대충 다 끝난 것 같고 김성태 위원 아까 문제를 제기한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끝내기 전에 제가 장관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대선이라는 게 나라의 정세를 놓고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좀 야속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제 이

름으로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 협약서에 서명한 김종남 제6대 위원장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이 정책 입장을 떠나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해고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해고되어서 인수위 앞에서 혼자 농성을 하고 있지요.

한 가지 여쭙어 볼게요.

지금 강릉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도 제 친구입니다마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김종남 위원장이 해고되는데 노동부에서 어떤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참 야속합니다. 제가 이것 서명한 제 이름과 김종남 위원장의 정책협약서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해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명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치적으로 볼 때 올바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제 아까 말한 국정조사에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사를 모으자는 의사진행만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국정조사가 당연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7명 위원에다가 심상정 위원까지 포함해서 8명이 모두 국정조사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성 추구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결의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간사께서는 그 점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김성태 간사가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홍영표 위원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김성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행정부가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행정부는 자리를 정리를 하고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짧게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신계륜** 뭐 있어도 될 것 같고 방청하신 분도 들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장차관하고 공무원들이요.

○**김성태 위원** 회의 마치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을 조금 전에 제가 마무리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홍영표 간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점을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성태 위원** 더 이상 의사진행에 관한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장관님! 들어도 괜찮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회에서 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발언할 마음이 사라져 버렸네요, 김성태 간사님이 집권당의 막강한 간사의 발언을 하셔서. 사실상 힘없는 당신들은 말하지 마라 이야기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심상정 위원** 각 당의 당론이나 당의 또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국회는 국회 고유의 또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된 배경과 또 그 속에서 우리 환노위원들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확인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쨌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노동 문제를 다루는 주무 상임위입니다. 따라서 각 당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기 입장을 각 당의 입장 때문에 정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저는 국회의 기능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서 논의하시면 되지요.

각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직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실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항상 상임위에서 물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저는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선 그런 결정과 운영은 맞지 않다 그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이 절망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열었는데 뭐 어쨌든 선거 결과나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어떤 절망감 때문에 돌아가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적어도 노동을 다루는 환노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기댈 만하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믿음도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아무도, 누구도, 어떤 당도, 국회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김성태 간사님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님들 중에서 또 상당수가 국정조사의 여러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입장 정리를 못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야당이 다수인 환노위라고 바깥에서 엄청 떠들기는 하는데 야당이 다수라서 뭐 야당 뜻대로 협조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성태 위원 아니, 했어요.

○한명숙 위원 언제 하셨어요, 뭘?

○김성태 위원 작년엔 했어요.

○한명숙 위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가 사실은 말로 하는 것인데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민생정치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힘 있는 사람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나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신경 좀 안 써도 돼요, 말도 좀 바뀌고 되고. 그러나 기댈 데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거 때 표를 구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

켜야 그게 도리지요, 그래야 민생 정치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치공세도 아니고 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강하게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세요, 오늘.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공감대를 가진 사항 정도는 결의를 해서 이것은 각 당과 상관없이 국회의 주무 상임위의 의견으로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우선 새누리당의 김성태 간사께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이것은 실제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선 때 대한문 앞에 천막에도 찾아가서 하겠다고 또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고, 또 대선 캠프의 중요한 분들이 다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대선 이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이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환노위에서 여야간에 그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양 지도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 모두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김성태 간사님께서 그런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갈음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대신 반드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쌍용차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으니까 이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홍영표 간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김성태 위원 제가……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까? 저는 동의한 적이, 심지어는 홍영표 간사님 말씀에도 저는 현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명숙 위원 지금 들었어요, 지금.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말씀은 다른 뜻인 것 같고요.

○은수미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김성태 위원 그만하십시오.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서로 양해를 좀 구했고, 이런 겁니다. 오늘 환노위원회 개최 자체도 사실상 지금 회기가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환노위는 지금 노동현장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가 열린 것이고, 거듭 아까 저희 새누리당이 대선 공간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이 분명히 존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1일 날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또 어제도 평택시민 쌍용차 경영정상화 범국민대책회의도 만 들어지면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평택시민들의 또 현재 쌍용차 노사 간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우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접하고, 작년 대선 공간에서 한 약속과,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조절하고 있는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을 심분 이해해 주시고,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작년도 쌍용차가 12만 대나 팔렸기 때문에 455명의 무급휴직자가 복직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쌍용차 문제 해결의 진정한 핵심은 쌍용차 경영정상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해고자들까지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쌍용차 경영 내용

을 잘 분석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는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을 심분 이해하시고 홍영표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회 회의를 종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마지막 말에 대해서 내가……

○김성태 위원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 안 된다니까.

○홍영표 위원 주고받으면 안 되기는…… 명확하게 해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 아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김성태 위원 그 입장 전달하겠다고니까, 전달한다니까요. 전달하고……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여기서 그만합시다. 양당 간사 의견 주고받은 것으로……

○홍영표 위원 아니, 양당 간사 간에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러면 앞으로 임시회도 아닌데 열 이유가 없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여야 수석부대표들 간의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께서 민주당의 우원식 수석부대표에게 ‘쌍용차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것을 다 양보했는데도 그것 하나로 ‘협상 결렬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의 의견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박근혜 당선인에게서 대선 후보 토론회 1차 토론회에서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도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준의 유사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고 안 계시고요.

세 번째로 황우여 대표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환노위 위원들께서도 이것이 무슨 개별적인 의견인 양 말을 하면, 첫 번째 새누리당의 입장은 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최소한 박근혜 당선인과 황우여 대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시고, 수석부대표의 의견이 당론이 아니었음을 밝혀 주시지 않는 한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오늘 다시 거듭 정리를 하겠습니까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이런 논의 내용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님에게 진정성 있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또 지금 현재 양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임시국회에……

○은수미 위원 결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쌍용차 국정조사 건은 현재 의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충을 한 부분을……

○은수미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에게서 결렬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김기현 수석부대표하고 우원식 부대표하고의 협상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 정도 서로 공감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저는……

○홍영표 위원 공감을 한다는 게 뭐냐고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의견을 우리가 모으자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끝에 가서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계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께 위임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뜻은 같지만 환노위원회에서 지금 결의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환노위 전체 의결로 가기가 어렵게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홍영표 간사가 설명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짧게 하시는데, 끝내기 전에,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보니까, 김성태 간사님이 이해하신다면 쌍용차지부에서 지금 세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가셨고, 김정옥 대협실장이 지금 계십니까?

(○김정옥 방청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제가 잠깐 물어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10분 안에 제가……

○김성태 위원 간사 간에 협의가 없었지만 제가 이해를……

○위원장 신계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방청은 할 수 있는데, 발언을 하려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회의가 쌍차 문제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방금 김성태 간사의 양해를 구한 제가 한 가지 짧게 물어볼게요.

제가 장관님께 물어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쌍차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분들을 몇 명이나고 물었던 말이에요. 160명 이내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옥 씨가 파악하기에는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옥 발언대에서 — 근사치에 가깝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직과 관련된 정리해고자가 159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정리해고자가 현재 6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파업에 동참했다고 해서 징계해고당한 사람들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이라고 이야기했

습니다. 그런데 무급휴직자가 회사 직원인데 왜 복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장 안으로 인사발령을 낸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희가 받은 탄압만큼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조사 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조사의 필요성들이 이 국회에서, 이 환경노동위에서 나왔던 그 소중한 말씀들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해고된 노동자들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신규 인원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회사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있는데,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태 위원** 발언을 좀 줄여주십시오.

(○김정옥 발언대에서 — 예, 정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말씀하세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김성태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옥 발언대에서 — (자료를 꺼내 보이며) 가슴이 떨립니다. 아까 이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저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고노동자들 너무나 억울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고요. 정부가 어떤 대책도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이채필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산하에서 우리 쌍용자동차만 해도 벌써 24명이 돌아가셨고, 박근혜 당선자가 나타났지만 또 5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갔는데, 과연 이것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 정부

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분……)

○**위원장 신계륜**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왕에 왔으니까 발언을 하시는 거니까요.

(○김정옥 발언대에서 —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위원장이 일정에 없었던 내용을 넣어 가지고 이러면 서로 곤란합니다.

(○김정옥 발언대에서 —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회사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평택,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못된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오셨는데, 쌍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사자 세 분이 비록 방청객 자격으로 왔지만 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짧게 기회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심상정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찬성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하면. 다만 이것을 전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지금 현재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여기서 들었고.

아마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깐 정말 전 노동자들이나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여기를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게 김성태 간사로부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시면서 지금 항의 조로 나가셨는데,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이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결렬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적으로 여기 환노위의 위원들이나 또는 김성태 간사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황우여 대표나 선거대책총괄본부장까지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인도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대통령을 깨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노동정책이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노동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부는 질의가 끝났으면 그분들은 시간을 여기서 지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해방을 시켜 드리고 우리들끼리, 여야가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서로 합의하는 중에 이것이 가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정도 우리가 서로 의논하다 보면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좁혀 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갖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노위를 다시 한번 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영문을 잘 몰라 가지고 의사진행에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성태 간사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아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 위원장님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적어도 환노위 차원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공식화해서 양당 지도부에 그것을 전달하자, 그리고 우리 김성태 간사는 언

론에 방송이나 이런 데에 출연을 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결의안 채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발언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 환노위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제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좋겠지만 정말 결의문 채택이 어렵다면 입장이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입장을 정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태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홍영표 위원** 혼자 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신계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홍 간사님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어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김성태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에서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것을 우리 지도부에 전달하겠다,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나요?

○**한명숙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완영 위원** 아니,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말씀 아니에요?

○**홍영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면 혼란이 없어진 거지요?

○**홍영표 위원** 그런데 아까 나중에 두 번째 발언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완영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

○**홍영표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된 겁니

까?

○이완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사태는 분명한 겁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의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질의는 끝났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환노위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원하나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달이 된 건가요?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민주당 위원 7명과 심상정 위원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길 원했지만 새누리당은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성심을 다해서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촉구하는 정도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한 차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기서 회의를 종결하고요, 새누리당의 양심과……

○한명숙 위원 그러면 새누리당의 위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환노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했으니 그것을 전달하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다 포함해서?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환노위 전체가, 그런가요?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계륜 제가 정리한 걸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게 정리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환노위 전체 이름으로 내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본회의를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당론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도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랐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고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경협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이종훈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이동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필
차관	이재갑
기획조정실장	전운배
노동정책실장	조재정
인력수급정책관	박종길
고용서비스정책관	노길준
직무대리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	김재훈
정책기획관	황보국
감사관	박광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평택지청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정진후·은수미·장하나·전순옥·이미경·강동원·한명숙·서기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안민석·유은혜·정진후·전순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회부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김경협·김관영·남인순·문희상·박홍근·배기운·신기남·신장용·우윤근·유대운·윤호중·홍종학 의원 발의)

11월 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5 은수미·문재인·최원식·정성호·김기식·김성주·최재성·진선미·홍종학·박영선·박완주·이춘석·김용익·한명숙·장하나·이인영·홍영표·남인순·김기준·김경협·한정애·이목희·김현미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이낙연·김대년·전순옥·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종학·배기운·김재운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6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7일 회부됨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최봉홍·강은희·박상은·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민현주·이재균·신성범·송영근·박덕흠·이에리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7 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김상민·민현주·이재균·주영순·박상은·신성범·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8일 회부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2. 11. 8 강기윤·김정록·이한성·김태원·이명수·이종진·박덕흠·김성찬·주영순·박성호 의원 발의)

11월 9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9 함진규·李宰榮·유승우·유승민·성완중·하태경·손인춘·이노근·이종진·김태흠·이이재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9 이상민·김춘진·유대운·민홍철·전해철·김경협·안민석·우윤근·김기준·이낙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2 정문헌·김정록·박성호·안홍준·정희수·김재원·김기선·황영철·염동열·권성동·한기호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1. 13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4 홍영표·은수미·박수현·우원식·장하나·박남춘·진성준·전병헌·안규백·이석현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1. 19 정부 제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9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  
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  
고희선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9 박인숙·문정립·유기준·정성호·  
신경림·이에리사·이현재·서상기·이명수·  
김태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0일 회부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20 정부 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0 홍영표·장하나·박수현·우원식·  
이낙연·이윤석·전순옥·김상희·강동원·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1 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  
김미희·김재연·정진후·김제남·金永柱·  
윤관석 의원 발의)

11월 22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홍영표·은수미·장하나·배재정·  
신기남·한정애·우원식·이낙연·이윤석·  
심상정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상희·  
김용익·배재정·서영교·유은혜·은수미·  
이미경·진선미·최동익·홍영표·홍종학·  
한명숙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이완영·최봉홍·서용교·김상민·  
김성태·홍지만·이한성·김현숙·강석훈·  
박대동·이철우·김한표·김상훈·김광림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김성태·최봉홍·권성동·전하진·

김영우·김상민·김세연·김용태·이완영·  
나성린·박상은·정의화·윤명희·이종훈·  
송광호·신성범·박민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3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은수미·홍영표·김기준·임내현·  
김경협·심상정·전순옥·장하나·최봉홍·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3 김상민·김성태·서용교·김한표·  
전하진·신성범·이완영·신경림·정문헌·  
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6 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  
오제세·홍종학·유성엽·김영록·최규성·  
김재윤 의원 발의)

11월 27일 회부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30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30 신학용·김우남·서기호·은수미·  
안규백·유기홍·박주선·주승용·안민석·  
김춘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김춘진·김우남·홍문표·김영록·  
이춘석·김윤덕·최규성·윤명희·장기정·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3 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  
정문헌·이명수·박성호·박상은·강석호·  
김동완·김종태·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  
정문헌·이명수·이자스민·강석호·김동완·  
김종태·이노근·박성호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3 김한표·하태경·전하진·문대성·김세연·김재경·김동완·김상민·이노근·이강후·여상규·신경림·정갑윤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김한표·하태경·전하진·문대성·김세연·김재경·김동완·김상민·이노근·이강후·여상규·신경림·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4일 회부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4 정부 제출)

12월 5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5 정부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이낙연·김제남·김미희·신장용·우윤근·배기운·김우남·홍종학·문병호·강동원·김성곤·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7일 회부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이낙연·유대운·홍종학·민홍철·양승조·강기운·이상민·김제남·배기운·이재영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7 윤명희·이만우·신의진·김을동·김한표·정희수·조명철·홍문표·홍지만·김춘진·고희선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강기운·김정록·강길부·김태원·이명수·김성찬·권성동·이만우·박성호·김기선 의원 발의)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박성호·이한성·이자스민·강기운·김정록·정희수·서상기·유승우·정문현·홍지만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7 강창일·이상직·최규성·윤관석·

김성곤·신경민·유성엽·안민석·우원식·임내현·도종환·강기정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강창일·배기운·우원식·장병완·김관영·최규성·정호준·이미경·안민석·신경민·주승용·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1 신의진·권성동·김진태·유일호·이상일·박인숙·박창식·김한표·류지영·이자스민 의원 발의)

12월 12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2. 13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4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3 신계륜·한정애·장하나·한명숙·김경협·은수미·심상정·홍영표·김우남·홍의락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7 장하나·한정애·전순옥·배기운·박수현·박홍근·홍영표·김우남·인재근·윤관석·홍종학·정진후·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12. 12. 21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2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27 이상규·오병윤·김미희·김재연·김선동·박주선·정진후·인재근·이석현·이석기 의원 발의)

12월 28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심재철·이만우·김관영·박인숙·유성엽·이인제·이재균·민홍철·문정림·조현룡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2. 31 정부 제출)

이상 3건 2013년 1월 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3. 1. 2 김경협·김기준·민홍철·배기운·안규백·유기홍·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원욱·인재근·전정희·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 2 이종진·유승민·서상기·황진하·노철래·이완영·윤재욱·경대수·유승우·이채익·李宰榮·민현주·홍지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 8 김춘진·박주선·김우남·이상민·안민석·정세균·유성엽·김승남·김성곤·김관영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3. 1. 10 전순옥·서기호·최동익·윤관석·전정희·이상직·최민희·조경태·유성엽·은수미·장하나·정성호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1 박민수·김관영·조정식·정세균·강기정·박수현·신장용·전정희·황주홍·강동원·김윤덕 의원 발의)

1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길정우·조명철·황진하·이완영·원유철·민현주·김영우·정의화·남경필·이에리사·정문현·류지영 의원 발의)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김재연·김미희·오병윤·김선동·이석기·이상규·임수경·김광진·장하나·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설훈·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서영교·심재권·우원식·유승희·유인태·이목희·이미경·이학영·인재근·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이용섭·박홍근·유성엽·장병완·진성준·김용익·우원식·정진후·강기정·이윤석·도종환·김동철·조경태·박완주·임내현·이춘석·유기홍·김재윤·유은혜·김성주·김춘진·홍영표·박혜자·양승조·김상희 의원 발의)

11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0 이미경·인재근·김선동·김춘진·배기운·노용래·오병윤·홍종학·강동원·정청래·박수현·김성곤·윤후덕·강기정·김미희·김재연·김상희·강창일·전순옥 의원 발의)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심재철·이만우·이한성·민홍철·김관영·박인숙·이재균·이종훈·조현룡·유성엽·박덕흠·문정림·박상은·조명철·이인제 의원 발의)

2013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환경피해 조사 및 보령  
앞바다 환경정화 긴급요청에 관한 청원**

(2012. 10. 26 청남 보령시 신흑동 1458-8번지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 회장 문수환 외 364인  
으로부터 손인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31일 회부됨